조국→백원우→천경득… 文 측근들 '구설수' 도미노

〈가족비리 논란〉 〈특감반 별동대 논란〉 〈선임행정관의 인사 개입 논란〉

윤용호 "檢 개혁, 패스트트랙에 여권-검찰 대립구도 뚜렷해져 檢의 靑 압수수색도 연장선 인 듯"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른바 '가족비리' 논란을 시작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특감반 별동대 논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인사 개입 논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구설수가 12월의 시작을 알리는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백원우 청와대 초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민정비서관실 출신 A수사관 빈소를 찾았다. 고인이 된 A수사관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소속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등을 수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더욱이 백 전 비서관은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모습. /연합뉴스

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 "백 전 비서관 의견을 들은 조 전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인새 개입 논란이다. 천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동생 일자리를 알선한 의혹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의 지난 2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천 선임행정관 동생 천모씨는 대한상공회의소와 KT 자회사인 KTH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의혹으로 지난 6월쯤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천씨는 작년 9월 대한상의 대외협력팀 선임전문위원직(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대한상의는 채용공고 없이 천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인가. 천 선임행정관 역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구설수가 불거지자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 관련 청와대에 대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섰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을 둘러싼 구설수가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낳았다. 그중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에 따른 영향력' 또는 '대통령 레임덕 신호탄'이란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여권과 검찰의 대립구도는 이달 초 진행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뚜렷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을 향한 구설수가 '검찰의 정치'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한국당 새 사령탑 첫 과제 '패스트트랙' 돌파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10일 끝나 유기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출마 심재철·권성동·안상수 등도 물망

강석호 의원에 이어 유기준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심재철·권성동·안상수·윤상현 의원 등도 제1야당 원내 사령탑 물망에 오른 가운데 첫 과제는 '패스트 트랙 정국 돌파'가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좌파독재 장기집권 시도를 철저히 막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당이 한국당을 배제·고립시키고 있는데, 다른 당과 협의·연합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권한 강화 ▲소통 강화로 국민의 뜻과 함께하는 원내전략 마련 ▲원내협상력 제고 ▲패스트 트랙 충돌 수사 관련 문제의 정치적 해결 ▲보수대통합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4선 유 의원과 3선 강 의원에 이어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심재철 의원도 출마 의사를 굳히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권에선 현재 3선 권성동·안상수·윤상현 의원도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앞서 출마를 공식화한 두 의원은 '협상력 복원'과 '정치력 발휘'를 강조했다. 강 의원도 전날 출마 선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으로,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휘봉을 넘겨받을 차기 원내 수장의 첫 과제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불거진 정치권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저지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동참한 한국당 일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당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패스트 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까지 내놨지만,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10일 끝난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일이기도 하다. 패스트 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과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가동하고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외치고 있다. /석대성 기자

지도부 갈등에 민생법안 결실 '난망'

데이터경제 3법 일부 등 볼모 잡혀

20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총선정국'에 앞서 민생법안 추수에 열을 냈지만, 원내 지도부 갈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17개 상임위별 법안 심사현황 분석결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가 지난 11월 한 달간 1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13개 위원회는 총 60회의 법안소위를 열었고, 총 24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처리한 법안은 1082건이다.

여야는 앞서 법안 심사 활성을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정국경색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고, 지난달 본회의 법안 처리율은 29.2%를 기록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은 ▲6월 38% ▲7월 36% ▲8월 8% ▲9월 16% ▲10월 0%로 매달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정기국회 과정에서 예산·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렸던 지난달에는 60%의 이행율을 보였지만, 각 당 원내 지도부의 본회의 개의 협상은 불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소위가 애써 심사한 법안은 본회의 가동 정지 때문에 국정 도입이 난망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순서대로 의결, 이후 민생법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예고한 패스트트랙 안건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회법상 예산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실시한 뒤 패스트 트랙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하겠단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3대' 의혹을 부각한 뒤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 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경제·안전 법안이 여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

/석대성 기자

檢 '전문공보관' 도입에 깜깜이 수사 우려

전국 각 지방 검찰청에 전문 공보관이 생겼다. 검찰이 전문 공보관을 통해 언론대응을 하고 '검찰의 수사상황 흘리기'를 막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응대 여부는 수사팀이 결정할 수 있어 앞으로 '검찰에 유리한 정보만 흘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관해 열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결과는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정규영 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심의위에서 유재수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인지 비공개, 의결 결과도 비공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내부적인 결정을 거친 후 심의위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심의위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실제 국민에 공개할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이 언론에 수사상황을 알리고 싶을 때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심의위가 해당 사건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모두 수사팀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손현경기자 son89@